

대량해고 모르쇠 하면서 이상직 제명만 하고 손 털기?

이스타항공 국유화해 일자리 보장하라

관련 기사 8면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2면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총액마저 줄다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위를 높이다

4면

- 미국 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4면
- 프랑스 노동자 시위 5면

서평
《성서, 쿼어를 옹호하다》

6면

현대차
임금 삭감
합의 비판

7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8면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김영익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201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 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공언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과 군비 증강을 전제로 한 평화 구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호크,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들을 계속 도입해 왔다. 미국산 첨단 무기를 워낙 많이 수입해, 트럼프가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라고 대놓고 자랑할 정도였다.

8월 국방부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 한국 국방예산은 경제 규모가 3배나 더 큰 일본의 방위에 산에 비등해질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군비 증가율도 최근에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말이다.

국방중기계획에는 경항공모함, 한국형 아이언돔, 핵잠수함 도입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극(極)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도 자체 개발하겠다고 한다.

경향모

최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데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에 자극을 받은 측면이 크다.

미국과 중국 등의 제국주의 간 경쟁이 악화되면서, 양국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려 애써 왔다. 최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미국 해군 군함을 현 299척에서 355척으로 늘리는 등의 해군력 증강 계획 ‘퓨처 포워드’를 발표했다. 그러



지난 4월 한국이 도입한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집값 폭등으로 난리가 난 가운데, “구축함 1척을 위해 모두 800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새 주택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국방부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 상대라고 본다.”

이런 갈등 속에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 등지에 긴장이 쌓여왔고, 이런 갈등과 경쟁에 자극받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다. 오늘날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군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동시에 한국의 군비 증강은 군비 경쟁이 악화되는 데 일조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에 항의해 왔다. 김영정은 한국의

F-35 도입 등을 두고 이렇게 비난했다.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데 목적이 있겠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어 들여왔겠는가.” 이것이 6월에 한반도 긴장이 불거진 한 배경이었다.

9월 23일 대통령 문재인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군비를 늘리는데 종전선언 제안이 한반도 평화 진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군비 증강 문제는 한미동맹 강화의 맥락 속에서도 봐야 한다. 한국군의 전력 증강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나토(퀵드)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도 합류하기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협력 수준은 높이고 있다. 지난해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한다” 하고 약속했다. 9월 중순 한국 해군이 미국, 일본, 호주와 태평양 해상 연합훈련을 벌인 일은 이 “조화로운 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향모 등이 미국, 일본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 등지에서 대중국 견제 활동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

지난 7월 미국과 한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강화될 여지가 더 커졌다. 이때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은 이 지침 개정의 의미 하나를 이렇게 말했다.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 확장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이로운 것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경제 위기로 대중의 삶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서민 지원에 인색하면서 군비 증강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에게 대중의 삶 개선보다는 무기 구입이 우선인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난리가 난 가운데, “구축함 1척을 위해 모두 800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새 주택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군비 증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 자원은 보편적 재난 지원금 등 위기에 빠진 서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

군비 경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군비 경쟁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핵무기를 포함한 경쟁인데다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이 점증하면서 아시아 곳곳에서 분쟁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좌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축 약속 이행,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특히, 핵무기 경쟁에 반대해 동북아 비핵지대화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런 제안들에는 국가 간 갈등 악화를 우려하고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문제 의식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국가들 간 약속으로 전쟁과 군비 경쟁이 항구적으로 저지될 수 있을까?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20년 동안 강대국들이 맺은 ‘평화’ 협약이 10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협약들은 참호 속에서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늘날 핵무기 관련 국제 조약들도 마찬가지다. 여러 지역에서 맺어진 비핵무기금지조약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적용될 모델로 제시되지만, 이런 조약들은 모두 강대국의 핵무기 독점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일시적 힘의 균형 등으로 협약들이 일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쟁논리 때문에 이런 약속은 항구적으로 평화를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

많은 좌파들이 군사주의 문제를 자본주의와 떼어내 따로 다루려 한다. 그러나 100여 년 전에 러시아 혁명가 니콜라이 부하린(1888~1938)은 이렇게 썼다. “전쟁 없는 자본주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 없는 자본주의 사회도 상상할 수 없다.”

체제의 동학

“무기의 존재가 전쟁의 주요 원인이나 동력이 아니라(물론 무기 없이는 전쟁할 수 없지만), 반대로 경제적 갈등의 불가피성이 무기의 존재 조건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이례적으로 격렬해진 우리 시대에 미친 듯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윤을 위한 경쟁적 축적의 논리가 국가들 간의 맹목적 경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군비 경쟁은 필연적이고, 이 경쟁은 결국 강대국 간 전쟁을 낳는다. 자본주의의 이런 파괴적인 동학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제국주의와 군사주의에 맞선 대안은 반자본주의와 분리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주류 개혁주의도 문제이나, 제국주의·군사주의를 자본주의 체제와 분리시켜 대응하려는 접근도 한계가 분명하다. 2018~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상당수 좌파들이 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를 평화문제에서 기대를 걸 만한 대상으로 여긴 것은 그런 약점의 한 사례다.

지배계급 일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해 싸워야 우리는 항구적 평화를 향해 조금이나마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총액마저 줄다

정선영

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막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티 2만 원 지원안조차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총액은 애초 정부안보다 274억 원 줄었다. 코로나 백신 예산 1839억 원이 추가된 것을 고려하면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액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추진을 앞두고 부당한 선별 기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지원에서 배제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절절한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목소리를 차갑게 외면했다.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이 전혀 사실이아님을 보여 준 것이다.

이번 지원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배제됐다. 정부는 만료 시점이 돌아오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개월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해고 위기가 불과 2개월 연장됐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게다가 무려 605명이나 정례하고 통지를 받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것에서 보듯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권한이 기업주에게 달려 있는 상황



길어지는 불황 속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커지지만 정부는 지원을 줄이고 있다. 9월 14일 성동구청 일자리 게시판을 바라보는 구직자

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특고 노동자만 25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그 대상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지급 대상과 액수가 1차 때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했다고 하지만 일회성으로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중소기업자영업자총연합회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60퍼센트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90퍼센트 감소를 겪었다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원리를 중시하며 건물주들의 이윤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이 위기의 시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난을 선별하기 위해 투입되고, 이런 절차로 인해 긴급 상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지원이 완료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최근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불과 47억 원 배정됐다. 그것도 빈곤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피해

아동 심리 상담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을 뿐이다. 정부가 사회적 돌봄을 방치한 상태에서 방과후교사는 수개월째 일이 없어서 수입이 제로인 상태를 버텨야 하고, 아이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처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적자 책임 떠넘기기

이처럼 길어지는 불황 속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을 택한 핵심 이유는 국가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은 국민들이 돈에 맛 들이면 안 된다고 막말을 했고,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제한하

는 재정준칙을 이달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우파들의 재정 긴축 공격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인사들과 우파들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심화하자 신속하게 200조 원이 넘는 기업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고,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1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도 했다. 향후 5년간 군비에 무려 300조 원을 쓸 계획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감세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이중잣대는 노동자·서민의 삶보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를 우선시 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냉혹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대폭 줄여 선별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내년 교육 예산은 2.2퍼센트 삭감했다. 공무원 임금은 0.9퍼센트 인상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을 뿐 아니라 노인 기준을 상향해 복지를 줄이려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책임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이 져야 한다. 막대한 기업·부자 지원 정책 덕분에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았다. 부자들의 자산은 더욱 불어나고 있다.

정의당·진보당이 요구한 것처럼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거둬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군비가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삶을 위해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전주현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가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낙태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 염원을 외면해 온 문재인 정부는 양성평등위 권고도 무시할 심산인 듯하다.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대체입법안은 여성 대중에게는 실망을 안겨 주고 낙



낙태는 여성의 권리! 2018년 7월 낙태죄 폐지 집회

태 금지를 외쳐 온 보수파들의 사기만 높여줄 것이다.

제약

낙태죄가 그대로 형법으로 존재한다면, 여성들은 낙태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계속 감내해야 한다. 낙태는 살인이라는 낙인찍기와 비난도 지속될 것이다.

‘임신 14주 내외’ 낙태 허용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낙태 허용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낙태의 많은 수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지만, 그 이후에 낙태를 하는 여성들도 염연히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가급적 빨리 낙태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

황에서 국가가 1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것은 억압적이고 여성 차별적이다.

기간 제한을 옹호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아는 모체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므로, 별도의 인격체가 아니다. 태아에 생명권이 있다는 주장은 여성을 그저 태아가 살아가는 환경쯤으로 취급하는 것이다(자세한 반박은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노동자 연대〉231호를 참조하시오).

정부안에는 기간 제한뿐 아니라 상담 의무화, 의사와 국가의 사전 허가 등 여러 제한 조건들이 덧붙을 가능성도 높다.

국가가 자의적 잣대로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부당하다. 낙태는 오직 여성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이 원한다면 기간과 사유 제한 없이 전면 보장돼야 한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 주수와 사유 제한 없이 언제든지 국가가 낙태약(미프진)과 낙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

해야 한다. 낙태 유급 휴가도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들에게 각별히 중요하다. 부유층 여성들은 그들의 부 덕분에 낙태 규제에 별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평범한 여성들은 큰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 낙태 관련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독교 우파 주도의 낙태 반대 운동에 맞서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와 낙태 규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 뉴스 문제
- ★ 독자편지 인천 초등학교 형제 화재 사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위를 높인다

도널드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항상 잘못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악다구니를 부리고 있는 지금은 특히 더 그렇다. 트럼프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트럼프를 단지 정략가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그로 도 진지하게 취급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데올로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경제적 국수주의로, 이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중국과 (그보다느 속도가 느리지만) 유럽연합을 상대로 벌이는 무역전쟁이 그 결과다.

둘째, “문화 전쟁”이다. “문화 전쟁”은, 1992년 공화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출마해 [당시 현직 대통령 조지 H W 부시를 상대로] 패배한 우파 정치인 팻 뷰캐넌이 전당대회에서 선포했던 것이다. 이는 1960~1970년대 대중 투쟁으로 이룬 개혁들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개혁들은 미국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1861~1865년 남북전쟁 후의 약속대로 모든 국민에게 시민적 권리의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 남부에서 벌어진 흑인 평등권 투쟁이 대표적 사례다.

또,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은 여성운동의 기념비적 승리였다.

뷰캐넌은 1992년 연설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빌 클린턴이 “여성의 요구만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 동성애자 권리를 인정하며, 종교계 학교를 차별하고, 여성을 전투부대에 들이려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런 쟁점들은 특히 기독교 우파들을 자극하는 것들이다. 트럼프는 기독교 우파의 지지를 받으려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보수 인사들을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한 것이 그렇다.



트럼프의 기회주의는 어떤 위험한 결과를 낳을까?

9월 18일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인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사망하자 트럼프는 우파가 6대 3으로 다수가 되도록 연방대법원을 구성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 되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이데올로기의 셋째 차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좌파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 말이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17일 ‘백악관 미국사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좌익 폭도들이 우리 건국 주역들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역사적 기념물을 훼손하고, 폭력과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고

있다.

“극좌 시위대가 ‘미국은 위대했던 적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교육 제도에 좌파 이데올로기가 침투한 탓이라며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하워드 진(1922~2010)을 언급했다.

“미국 대학가에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범람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교리로, 미국이 사악하고 인종차별적인 국가이고, 어린이들조차 억압의 공모자이며, 미국 사회 전체가 급진적으로 변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영향력

지당한 말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비롯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미국 사회의 인

종차별적 뿌리를 자세히 기록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학자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가 거론한 트위터 게시글은 “비판적 인종 이론”을 “서구 문명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하지만 올여름에 부상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상황을 바꿔 놓았다. 이 전투적 운동은 미국이 “탈인종” 사회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들춰냈다.

트럼프는 이 운동을 기회 삼아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고 있다.

좌파에 대한 트럼프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은,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안티파” 활동가들을 비난하고 경찰과 자기 지지자들 모두를 부추겨 ‘흑인 목숨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도록 한 것과는 연관이 있다. 이런 부추김 때문에 총격 사망 사건이 최소 세 건 벌어졌다.

트럼프의 전술은 선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을 “좌파 문화혁명” 동조자로 낙인찍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전술에는 트럼프 자신의 전투적 거리 운동[‘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운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탄탄하게 만드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이미 주류 집단들 사이에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데,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패배할 듯하면 무장한 지지자들을 동원해 대통령직을 지키려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합법적 방식으로든 비합법적 방식으로든 유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그의 기회주의적 동기에 따라 트럼프는 흠어져 있고 파편화돼 있으며 뚜렷한 지향도 없던 극우를 진정한 파시즘 운동의 단초가 될지도 모를 무엇인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남길 최악의 유산일 듯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3호 / 번역 김준호

미국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9월 18일 사망한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불 붙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반동적인 인물을 지명할 듯하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한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사법 체계는 정쟁의 장이 되고 판사들은 많은 경우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한다.

자유주의자 긴즈버그의 후임을 트럼프가 지명하면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가 연방대법원의 압도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제껏 쟁취하려고 싸워 온 기본적 권리에 위협이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위험이 있다.

트럼프는 “지체 없이” 여성 후임자 지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임 연방대법관은 여성일 것이다. 후임자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내가 남자보다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해서 그렇다.”

2016년 미국 대선 9개월 전에 연방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가 사망했을 당시, 공화당은 다음 대통령이 정해지기 전까지 상원에서 대법관 후보 심의를 거부했었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후임도 11월 대선 후에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선거에 이토록 가까운 시점에 공화당 성향 판사가 연방대법원에서 다수가 되면, 우리 계급이 쟁취한 성과를 후퇴시키려는 트럼프의 우파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다.

사망 이후 긴즈버그는 여성 권리의 설계자로 묘사되고 있다.

역대 미국 연방대법관 중 여성은 네 명뿐이었는데, 긴즈버그는 그중 두 번째였다. 1970년대에 변호사였던 긴즈버그는 성 차별에 맞선 입법을 위해 활동했다.

이러한 법들은 여성 해방 투쟁의 일환으로 벌어진 운동으로 쟁취됐다.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 자신의 투쟁 때문에 권력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1993년 당시 대통령 빌 클린턴의 지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긴즈버그도 계속 그렇게 했다.

긴즈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곳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 여성이 예외적인 존재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인물로 자유주의자들과 미국 민주당 주류에게 칭송받았다.

긴즈버그가 강경 우익 연방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와 돈독하게 지냈다는 것이 마치 미담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개혁 입법과 사법 제도로는 근본적 변화를 쟁취할 수 없다. 성과는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쉽게 뒤집힐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법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했음에도 17개 주는 여전히 낙태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하에서 쟁취한 법적 권리들은 기려야 마땅한 것이고 대개 평범한 사람들이 투쟁한 덕분에 이뤄진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권리들을 법적으로 인정받다고 해서 전투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닥칠 공격에서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길은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 자신이 저항하는 데에 있다.

이샤벨 링로즈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3호 / 번역 김준호

분노한 프랑스 노동자, 전국의 거리로 나온다

9월 17일 프랑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몇몇 노동조합연맹과 학생 단체들이 소집한 전국 행동의 날 시위에 참가했다.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비슷한 시위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정부와 사장들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넘쳐났다.

청년 대표단은 다국적기업들을 구제하느라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은 자신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사장들은 수십억 유로를 챙기고 있는 현실을 통렬히 고발했다.

마트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참여율이 높았는데, 모노프릭스, 까르푸 등의 마트 체인점 노동자들 외에도 급여와 노동조건을 놓고 파업 중인 비오쿠프(프랑스의 유기농 전문 생협)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까르푸 노동자인 아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팬데믹 [1차 유행] 기간 동안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음식과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계산대에서 일하고, 선반을 채우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상도,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상[프랑스의 유통업체] 매장들은 1500명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염치도 없는 것입니다.”

브리저스톤 타이어 또한 863명이 일하는 프랑스 북부 도시 베뮈의 공장을 내년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항의 시위가 있었



병원에 더 많은 투자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가한 간병인 노동자

고 공장 점거 얘기도 나온다.

최근 프랑스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도 모든 이들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현재진행형

교사 알리스와 클레어는 1만 명이 참가한 파리 시위에 참여했다. 클레어는 <르몽드> 온라인판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리에 모이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알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원에서 시위할 때보다 수업할 때가 훨씬 더 불안해요. 학생들과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하고, 정부 조치들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날 행동이 전반적인 투쟁 계획의 일환이 아니라 일회적 행사로 잡힌 것 또한 참가자가 제한적이었던 이유의 하나다.

노조 지도자들이 업포 놓기 이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정서가 광범하고, 단초로 삼을 만한 저항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파업 참가자 중에는 아스트라라브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노동자들도 있었다.(하단 사진)

파업자들은 전원에게 1500유로의 코로나바이러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검사당 수당을 1.25유로에서 2유로로 올리기를 원한다. 인력 총원도 요구한다.

매일 최소 2000여 건의 검사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아스트라라브에서는 18일 현재 파업이 계속됐다. 노란조끼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더불어, 이런 저항들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차리 김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3호

번역 김동욱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임준형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와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의 수요 때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선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정부가 2015년부터 3~5개월 기간의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시행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코로나 사태로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이 막히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편이 막히면서 새로 입국해 미등록이 되는 경우는 줄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출국하지 못해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몇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 기한을 유예했을 뿐이다.

게다가 출국을 유예한 기간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게 하니 이주노동자들은 생계 걱정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대 3개월의 농·어업 계절근로를 허용했지만 모집 인원이 1400여 명에 불과하다. 반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중 올해 2~8월 취업활동기간이 끝났거나 출국 대상인 사람은 약 3만 4000명 발생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같은 기간 임시 체류 기간 연장이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는 여러 번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3500건이었다. 그 외 인원 중 일부는 미등록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 되자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도 과밀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3월에 389명이었던 수용 인원이 9월 7일 현재 1045명으로 2.5배 넘게 늘었다. 1개월 이상 구금된 이주민 수는 3월에 64명이었다가 6월에는 385명으로 6배 이상으로 늘었다(아시아의 친구들의 정보 공개청구 결과). 구금된 이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법무부는 현재 수용된 인원이 정원의 60퍼센트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이 ‘정원’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의구심만 들 뿐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년 7개월이나 갇혀있다가 2018년 11월 석방된 한 난민은 한 방에 12명씩 수용돼 있었다며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1년간 구금돼 있던 이주민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의료진이나 시설이 미비한 것과 무관치 않았다.

외국인보호소 과밀화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미등록자에게 출국명령 시 최대 2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구금할 수 있는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과 이행보증금을 걷는 방식으로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등록 신분으로라도 체류하기로 마음먹은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리는 만무하다. 결국 개정안은 미등록자에게 벌금만 추가로 물리는 효과가 날 것이다.

이주노동자 운동 일각에서는 미등록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구금 대신 자발적 출국 유도를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 출소하는 것, 코로나 자가격리 앱이나 입국자 격리센터 활용 등도 거론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이주민의 고통을 다소라도 줄여 보려는 의도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자진 출국 유도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자진 출국을 보증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가 따라붙을 것이다.

근본에서 체류 “자격”을 운운하면서 이주민을 불안정한 지위로 묶어 두는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미등록 이주민의 고통과 그들을 상대로 한 단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을 조건 없이 모두 합법화하고, 그에 따라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를 폐쇄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국경 통제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해 데려오면서도 체류 기간을 한사코 제한하고 그들의 국내 정착은 가로막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그 속내를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일시적 이주근로자 수입 제도는 자본가에게 ‘저렴하고’ 단결력이 없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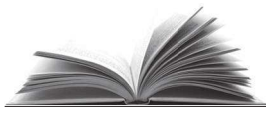
정부가 미등록자를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나 코로나 사태로 출국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충분한 체류 기간 연장과 취업 허용은 한사코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득을 가져다주는 ‘단기순환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 규제는 인종차별을 조장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도 낳는다. 체류 자격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편견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와 정착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진실은 일자리 부족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주민, 특히 미등록 이주민을 일관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이민 규제와 국경 통제에 도전해야 한다.



코로나 진단 검사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바이러스 검사 노동자들



서평 |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양효영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화여대에 반동성애 단체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당시 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강연 취소를 압박했다. 저자는 이런 압박들에 굴하지 않고 수업을 지켜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저자는 교회 내 반동성애 움직임들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 책을 출판했다고 한다.

여전히 개신교 내에는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토론도 없이 내치는 상황이다. 최근 허호익 전 대전신학대 교수가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바로잡는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동연)를 발간했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면직·출교 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이건 교수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징계와 퇴출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가 발간돼 반갑다.

이 책의 장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룬 1장과 성서 해석의 쟁점을 다룬 2장으로 나뉘서 사회적·종교적 쟁점 모두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가?’, ‘동성애는 질병인가?’ 등 성소수자에 대한 각종 오해를 명쾌하게 반박하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군형법 92조6,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문제 등 법적 차별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개신교 내부자로서 반동성애 운동의 논리와 전개를 다룬 부분도 흥미롭다. 저자는 극우 개신교 집단이 독재정권들과 유착해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부패 행태를 보이며 신자수가 감소하는 위기를 겪게 됐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동성애 이슈”는 이러한 개신교 내부의 위기로부터 외부의 적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내적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한 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동안에는 자기 문제를 잠시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반동성애 운동이 개신교 위기 모면 전략으로 기획됐지만 오히려 교회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는 저자의 지적은 타당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표출은 개신교의 평판을 다시금 떨어뜨리고 교회 안팎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성서가 동성애를 단죄한다는 보수 개신교의 주장은 시대와 맥락을 무시한 아전인수다. 2019년 개최된 제20회 서울 퀴어퍼레이드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박경미 지음, 한티재, 368쪽, 16,000원

자본주의 등장과 성소수자 차별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저자가 성소수자 차별의 기원에 대해서 한 부분을 할애해 충실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의 기원과 역사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무지개 속 적색》(책갈피)을 여러 부분 인용해 소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계급사회 등장과 가족의 형성에 대한 엥겔스의 이론을 소개하며, “성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려면 계급사회의 발전과 함께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계급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계급사회 이전에는 남녀관계 역시 훨씬 평등하고 성에 대한 제약도 덜했지만, 계급사회 발전과 함께 일부일처

제와 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계급사회 전반에 걸쳐 동성 간 성애에 대한 태도는 다양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전쟁으로 포획한) 노예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생식과 무관한 동성 관계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저자는 이렇게 요약한다.

“19세기 후반 서구사회에서 동성애를 성도착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는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단지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예찬하는 다양한 경향이 있었고, 이것 역시 복잡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역사적 분석으로 성소수자 차별은 신의 뜻이나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화 초기 노동계급 가족의 재구성과 연결돼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산업화 초기의 지독한 착취 속에서 노동계급의 가정은 붕괴했고, 그들에게는 가난과 고통만이 남겨졌다. 그들에게는 노동력을 팔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한편 전 유럽을 휩쓸던 급진적 혁명의 바람 속에서 기존제도가 붕괴하고 위계 질서도 무너지자 부르주아지 일부는 사회 불안이 확대되고 자신들의 사회 통제력이 약해질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 사회 통제 등을 위해 부르주아지는 가족을 재건하려 했다.

“가족의 해체와 성적 질서의 붕괴는 사회불안과 혁명의 위험을 뜻하는 강력한 은유가 되었다.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성적 행위와 관행을 공격하고 가족을 강화하는 수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상적인 가족 개념과 성역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낙인찍기 시작했다. 일탈적 성행위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격받았고, 그중에서도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과 성매매 여성 두 집단이 주된 표적이 됐다.”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 개념, 즉 대다수 이성애자와 구분되는 동성애자라는 개념은 이런 체계적 차별 과정에서 생겨났다. ‘동성애’ 용어는 1869년에야 처음 등장한다.

보수 개신교의 성서 오독

성소수자 차별이 19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했다는 사실은 성서가 동성애를 비난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말하자면 성서 안에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간 〈노동자 연대〉도 보수 복음주의의 성서 오독에 대해서 같은 논지의 비판을 해 왔다(‘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노동자 연대〉 174호, 최일봉).

같은 이유에서 저자는 ‘성서는 동성애를 긍정한다’는 해석도 과도함이 있다고 본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제시되는 본문이 실제로 반동성애적 본문일 수 없듯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제시되는 본문 역시 실제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균형 잡힌 입장으로 보인다(그런 점에서 책 제목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

2장에서 저자는 흔히 동성애를 단죄한다고 여겨지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며, 이 구절들이 대부분 오늘날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와 무관하며 당시 그런 구절이 쓰인 맥락

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을 배격하고 풍부한 배경 설명과 맥락적 접근으로 오해들을 풀어간다.

예컨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상에 내려온 천사를 환대하기는커녕 강간이나 하려고 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벌을 받는 얘기다. 동성 간 성행위가 이 얘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나그네 환대를 실천한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내용과, 환대는커녕 나그네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소돔 사람들의 얘기가 대조적으로 제시돼 있다.

또한, 레위기나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동성애를 비난하는 듯한 구절들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와는 관계가 없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더 많은 여러 구절에서 여성, 이방인 등에 대해 급진적 포용주의를 주장했다. 유다교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차이들이 녹아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저자는 이런 급진적 포용주의야말로 개신교가 취해야 할 진정한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저자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른 진정한 죄악(낯선 이에 대한 폭력)은 반동성애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는다.

“낯선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와 공포에 근거해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오늘 소돔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이 책은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서다. 일독을 권한다.



사진 출처: 현대자동차

양보는 노동조건과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8월 13일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한달 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동결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불필요한 양보는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박설

9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격려금 등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임금 총액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생산성·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악화시키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 주류 언론들은 현대차 노조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결단을 내렸다고 추켜세웠다.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울산시장도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반가운 선물을 받았다”고 반겼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현대차 수석 부회장 정의선은 올해 상반기에 연봉이 12.5퍼센트나 올랐다. 현대차의 현금 보유액은 지난해 말 8조 6820억 원에서 지난 6월 10조 8838억 원으로 25.4퍼센트나 늘었다. 사내유보금도 140조 원이 넘는다.

더구나 잠정 합의안이 나온 바로 그날 SK증권은 3분기 현대차의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187.3퍼센트 증가한 1조 1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가는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만든 성과이다.

올해 들어서도 노동자들은 거듭 희생을 강요 받았다.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휴업할 때는 임금이 삭감되고, 일

감이 몰릴 때는 노동강도가 세지고 특별연장근로까지 해야 했다. 변속기와 배송·출고센터 등의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최대 주당 60시간까지 일했다. ‘품질 향상’, ‘기초질서’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 현장 통제가 강화되고 노동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외주화, 모뎀화 시도도 잇따랐다.

요컨대, 사측은 “고통 분담” 하자더니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자기 배만 채웠다. 그리고 이제는 위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임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이런 사측에 협조해 양보안에 잠정 합의한 것은 결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이상수 지부장은 “악조건 속에 이뤄 낸 최선의 성과”라고 말하지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측은 충분한 지불 능력이 있고 노동자들은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적잖은 현대차 노동자들은 노조가 싸워 보지도 않고 양보부터 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상수 집행부는 이미 지난 4월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임금을 자제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며 임금 투쟁의 길을 뻐 왔다. 6월에는 “품질 향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노사 공동 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 합의에도 앞선 제안·합의와 같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즉,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투쟁해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회사 살리기 위해 협력(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정 합의안이 특히 고약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은 경제 위기 시기에 현대차지부 같은 대형 노동조합이 사측에 협조하기로 했

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해 조건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일찌감치 노사정 합의를 이용해 작업 현장 차원으로 노사 협조주의를 확산하고자 해 왔다.

계급 협조가 낡은 문제점

물론,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을 만들자는 것은 공상이다. 특히 지금처럼 불황기에 사용자들과 정부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짊어지게 하려고 한다. 노사 협조가 결국 노동자들에게 대한 착취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이다.

그 점에서 당장의 임금을 양보해서 “미래 발전”과 “고용 안정”을 지킬 수 있다는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주장은 헛된 기대이다.

노동자들의 양보는 결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노조의 임금 양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된 양보 압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현대차 사측도 벌써 몇 년째 ‘올해가 어렵다’, ‘특별히 올해는 더 어렵다’ 하면서 임금 수준을 억제해 왔고, 급기야 올해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기본급 동결에까지 이르렀다(임금은 지난 수년간 삭감돼 총액으로 보면 2009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노조가 이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지 않고 2년째 무쟁의로 후퇴를 수용해 온 것이 특히 문제를 키웠다. 그럴수록 노동자들도 사기가 꺾이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이 또한 지난 몇 년간 집행부가 양보를 거듭하면서 계속 후퇴해 온 것들이다. 가령,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적기 생산’에 매진하거나 신차 생산 일정에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그렇다. 노동강도, 인력 총원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현장 투쟁이 벌어져 생산이 지연되는 것을 제어하려고 사측은 이런 요구를 해 왔다.

반면, 잠정 합의안에 담긴 고용 안정 약속은 모호한 말뿐이고 현재의 단체협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이다. 노조 집행부는 매년 1000여 명 넘게 생기는 인력 감축(정년 퇴임자 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수용하고 있고, 야금야금 확대되는 전환배치, 공정 축소, 외주화에도 저항하지 않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의 양보는 노동조건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롭다.

부품사·하청 노동자를 위한다는 거짓말

현대차지부의 무분규 임금 동결 합의는 중소 부품·하청사 노동자들, 제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임금 삭감을 압박하는 지렛대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상수 집행부는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에 신음하는 중소·영세, 부품협력사 노동자들과의 “동반 생존”을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진정 이 노동자들을 생각했다면 양보가 아니라 투쟁의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반대로 현대차지부 같은 대기업 노조가 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면, 부

품·하청사 노동자들도 희생을 강요받기가 쉽다.

2018~2019년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임금 총액은 거의 동결)을 받아들였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 산업 전반의 임금 수준이 하락했고 부품·하청사 노동자들의 조건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 부품사 노조들은 일명 “양재동 가이드라인”(현대차 임금 가이드라인)에 가로막혀 임금 투쟁이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나마 2018년에 현대차지부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얻었다던 현대차 사측의 부품·하청사 지원도 수백억 원 수준으로 꺾였었다. 특히 그 돈이 부품·하청사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도 현대차의 “부품사 상생 지원”이 포함됐지만 노동자들의 조건·고용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말은 없다.

무엇보다 부품·하청사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공격에 잘 맞설 수 있으면, 경제 위기 하에서도 투쟁해서 조건을 방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시돼야 한다. 그 점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이 사측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맞서 조건을 방어하면, 부품사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원청사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에 나선다면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임금 양보는 현대차 노동자들에게도, 부품·하청사 노동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진정 필요한 일은 노동자들의 양보나 위기 극복 협력이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이정원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이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직의 두 자녀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가 핵심 의혹거리다.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100여억 원을 조달해 수백억 원 가치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 주식 보유, 탈세,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 국회의원이 자기 가족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점은 특히 비난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못 내줬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직은 '지분을 헌납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뻔뻔스러운 태도다.

이상직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등 친문재인 인사로 꼽히고,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승승장구해 왔다. 공공기관장을 거쳐 국회의원 배치까지 달랐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 책임론도 함께 커졌다. 이번 구조조정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단위 사업장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강제 해고인데다, 고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이상직을 질타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얼마 전 구성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1호 조사 대상으로 이상직을 꼽았고, 추석 전 징계(제명을 포함해)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세청도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도 맞물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홍걸 제명, 윤미향 당직 정지 등도 이어져 왔다.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그렇다고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부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기업주에게 수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한 톨도 지원하지 않는다. 9월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이상직 징계 추진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비난이 정부를 향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피용이지, 해고 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다.

이상직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수개월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과 정부는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 유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전부다.

사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올해 내내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급기야 대규모 해고가 벌어지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설사 민주당이 이상직 제명을 결정한다 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줄곧 외면했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자들의 조건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구조조정과 매각을 지원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제주항공에는 인수 자금 2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는 지

금까지 단 한 톨도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가 항공사 지원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3조 20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 등 노동자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자들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를 이용해 정부를 비난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는 이상직 일가의 부패, 노동자 희생 강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아로새겨 있다. 사실 정부는 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부추기며 위기를 키워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결국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와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말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유화

노동자들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여당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투쟁할 수 있다. 정부에게 일자리 보장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노동운동은 우선 이상직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과 재산 반납,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이 이상직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마땅한 일이다.

또,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등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유동성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일단 고용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작해야 최장 8개월간만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이스타항공의 기업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 이후에 고용유지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조와 정의당 등이 무급 순환 휴직, 체불임금 부분 포기 등과 같은 조건 후퇴 양보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동안 임금 삭감과 체불로 고통 받아 온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다, 그것은 사용자와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내는 효과를 내기보다 조건 악화 압박만 더 키우기 십상이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최근 임금채권을 이용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무책임한 사용자를 믿고 기다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답답한 심정의 반영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도 고민하듯, 이는 "본질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되는 기업 회생 절차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데다 파산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크다.

대안은 있다.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 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타항공처럼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고용을 지킬 유일한 능력은 국가에게 있다. 정부는 마땅히 그런 책임이 있다는 압력도 받는다.

지금 정부가 기업들에 쏟아붓는 돈의 극히 일부인 수백억 원을 투입하면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정부에게 책임을 제기하며 투쟁해야 노동자들의 필요를 강제할 수 있다.